

OGP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2021년-2023년

KOREA

2021. 7.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성 증진, 시민참여 확대, 부패 방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 등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OGP 참여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열린정부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한민국 정부의 열정과 실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최근 2년간 의장단으로서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네 차례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총 39개 과제를 이행했다. 앞의 세 차례의 국가실행계획은 정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제4차 국가실행계획은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OGP는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국민의 영향력(Level of public influence)을 ‘참여’ 단계에서 ‘협력’ 단계로 상향 평가했다.

2021~2023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제4차 국가실행계획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환경 변화 요인들을 고려하고, 네 차례의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을 통하여 얻은 교훈과 평가를 토대로 수립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OGP의 제11대 의장국으로서 OGP 의장단 3대 비전(OGP co-chair vision)인 ‘①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②반부패, ③포용적 디지털 혁신’을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의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보하였는데,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의체 구성 및 활동을 권고하는 OGP 운영규정에 따라 2017년 출범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7개 중앙·지방정부와 11개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민관협의체이다.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위원장, 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서울특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민간위원

C.O.D.E¹⁾(위원장), 오픈넷(간사),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알권리연구소, 정보화사회실천연합, 정의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투명성기구,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1) Commons, Openness, Diversity, Engagement

행정안전부는 2019년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포럼을 제도화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추진 방법과 절차, 일정 등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걸쳐 시민 사회와 상호협약하여 진행함은 물론 열린정부 가치에 부합하는 공약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 달간 국민을 상대로 열린정부 과제를 공모하여 총 140건(정부제안 77건, 민간제안 63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내에 디지털·개방, 반부패, 재정 투명성, 참여·사회적가치 총 4개 분과로 이루어진 TF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민간위원의 주도하에 실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했다. 제5차 국가실행계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로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최종과제 선정을 위해 시민사회 및 관계부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OGP 의장단 3대 공동비전에 따라 총 14개의 과제가 제5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최종 과제로 선정되었다.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1. 청년의 정책참여와 해외 네트워크 강화
2.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
3.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4. 국민의 예산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반부패

1.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발주 및 적정성 온라인 제공
2. 내부고발자 보호
3.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생활 속 불공정 개선
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
5.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

포용적 디지털 혁신

1. 디지털 포용 확대
 2. 디지털·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3.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5. 회의 정보공개 확대
-



| 제6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향후 계획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의 범정부적 협업 이행력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제6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보다 균형있게 담긴 모범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정부 의견

이번 제5차 국가실행계획에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들이 제안한 여러 사항들을 최대한 담고자 하였으나, 민간위원들이 두 차례 제안한 판결문 공개, 수익소유권 투명성 등 몇 가지 제안들은 이번 계획에 담지 못했다. 이는 담당 기관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속의 과정이 다소 부족하여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포럼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등 포럼운영 및 국가실행계획 수립의 전반적인 과정과 절차도 OGP 정신에 부합하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등 포럼 운영을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사회 의견

민간위원들은 국가실행계획 수립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분과별 간사 위원들은 각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부처 담당자들과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었다. 청년 워킹그룹의 활약도 포럼의 미래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민간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5차 국가실행계획이 정부가 제안한 무난한 과제 위주로 이루어진 점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하더라도 제4차 국가실행계획에서 크게 진전하지 못한 것으로, 아쉬움이 있다. 이는 포럼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불분명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정부가 포럼의 근거 규정인 행정안전부 훈령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승격시키고,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포럼 운영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전제가 되어야 할 실질적 권한의 배분, 정확한 정보 및 예산의 제공 등 보완되어야 할 점이 아직 많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 새로 구성될 포럼은 시민참여의 진정한 플랫폼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포럼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포럼 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국한하지 않고 수립된 계획의 이행점검,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도하도록 하여 제6차 국가실행계획은 보다 열린정부 가치에 부합되도록 발전시켜나가고, 국가실행계획이 열린정부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OGP 공동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민관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열린정부 가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과제 목록

공동비전	실행과제	주관부처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활성화 · 시민참여를 통한 코로나19 회복과 도약	1. 청년의 정책참여와 해외 네트워크 강화	행안부
	2.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 - 사회 전 분야 성별 다양성 제고 - 공공부문 장애인 대표성 제고 등 균형인사 확산	여가부 인사처
	3.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행안부
	4. 국민의 예산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기재부 행안부
반부패 · 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신뢰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5.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발주 및 적정성 온라인 제공	과기정통부
	6. 내부고발자 보호	국민권익위
	7.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생활 속 불공정 개선	국민권익위
	8.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	국민권익위
	9.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	행안부
포용적 디지털 혁신 ·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적 혁신 · 국민·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10. 디지털 포용 확대	과기정통부
	11. 디지털·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과기정통부 행안부
	12.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행안부
	13.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행안부
	14. 회의 정보공개 확대	행안부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1. 청년의 정책참여와 해외 네트워크 강화

2.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
3.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4. 국민의 예산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주관부처 · 부서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관련자	행정개혁시민연합 청년워킹그룹
OGP 가치와의 관련성	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영향력 증대, 시민사회를 위한 환경 조성

공공문제

열린정부 구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시되고 있으나 미래세대인 청년이 정책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기회는 많지 않다.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정부운영·정책에 청년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전반에 담기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약내용

이 공약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강화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①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기회 확대

(현황)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워킹그룹을 구성했다. 민간위원 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으로 매년 100여 명의 청년을 모집하는 청년워킹그룹은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계획)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6개월뿐만 아니라,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안은 상시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정책화를 위해 정부 기관과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② 범정부 정부혁신 평가 참여

(현황)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주무부처로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혁신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을 포상한다.

(계획) 청년이 정부혁신 평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에 포함하고 국민체감도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③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OGP 내 청년 네트워크 구축

(현황)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의장국으로 선출되었다. 2020년 10월부터 1년간 78개 회원국을 대표해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활동을 주도하고, 시민사회의장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마련하고 있다.

(계획) 대한민국 청년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의장단 비전에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OGP 참여를 포함하고, 각 회원국이 민관협의체 내 청년 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하겠다. 특히, 2021년 대한민국이 개최 예정인 제7차 OGP 글로벌서밋 등 국제적인 회의를 계기 삼아 다양한 국가의 청년 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열린정부 민관협의체에 제안 상시화, 정부혁신 평가를 통해 청년 참여의 효능감이 증진되고, 청년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정책이 마련될 것이다. 아울러, 청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의 열린정부 활동 전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열린정부 활동을 위한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내 청년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정례회의 개최 및 청년워킹그룹 운영	2020. 9. 1.	계속
국제청년서밋 개최	2020. 9. 1.	2020년 10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단 공동비전 마련 및 이행	2020. 10. 1.	2021. 9. 30.
범정부 정부혁신 평가단 참여	2020. 11. 1. 2021. 11. 1.	2020. 12. 31. 2021. 12. 31.
제7차 OGP 글로벌서밋 개최 계기 청년세션 구성	2021. 1. 1.	2021년 4분기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1. 청년의 정책참여와 해외 네트워크 강화

2.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 (2-1. 사회 전 분야 성별다양성 제고)

3.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4. 국민의 예산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주관부처 · 부서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관련자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해경청, 여가부, 과기정통부
OGP 가치와의 관련성	(참여 · 사회적 가치) 해당 공약은 사회 전반의 성별 균형적 참여도를 제고하여 성별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문제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여성의 사회 ·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미흡하며, 특히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서의 여성 참여가 부족한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대표성 제고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 포용성 강화를 통해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가치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토대로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 한국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발표 유리천장지수 29위로 9년 연속 최하위(여성관리직 : 한국 15.4%, OECD 평균 33.2% / 여성임원 : 한국 4.9%, OECD 평균 25.6%)

공약내용

이 공약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서 추진된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17년 11월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18~'22)」의 내실 있는 이행관리를 통해, 공공부문 각 분야 여성참여 및 대표성 제고 제도적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은 고위공무원, 국가·지방직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 교장·교감 및 국립대 교수, 군·경찰 등 12개 주요 공공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범부처 합동 계획이다.

12개 분야별 '22년 달성목표	• (고위공무원) 10.0% / (본부과장급) 25.0% / (지방과장급) 22.5%
	• (공공기관 임원) 23.0% / (공공기관 관리자) 28.0% / (지방공기업 관리자) 11.0%
	• (국립대교수) 19.1% / (교장 · 교감) 45.0% / (정부위원회) 40.0%
	• (군 간부) 8.8% / 일반경찰 15.0%(관리직 7.0%) / 해양경찰 14.4%(관리직 2.9%)

민간부문에서는 민간의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19년에 처음으로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 내 성별다양성 제고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개선 노력을 담은 자율협약, 컨설팅 등 기업지원, 관련 연구조사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공공 · 민간부문 전반의 노력을 통해,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의 성별균형적 관점 반영과 조직 및 직장 내 성별 다양성 제고로, 사회 전반 성평등 사회가치 실현과 공정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져 추진된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이행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을 관리한다. 더불어 분야별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성 참여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기업과의 자율협약을 지속하고, 매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 등 관련 연구·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해당 사항 없음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연도별 실적 점검 및 추진계획 수립	전년도 12월	다음연도 3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상반기 실적 점검 및 발표	매년 7월	매년 9월
성별균형 포용성장 컨설팅 제공	연중	-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조사·발표	매년 7~9월	-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1. 청년의 정책참여와 해외 네트워크 강화

2.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 (2-2. 공공부문 장애인 대표성 제고 등 균형인사 확산)

3.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4. 국민의 예산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주관부처 · 부서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관련자 |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참여 · 사회적 가치)

해당 공약은 장애인 채용 확대 및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공직 내 다양성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문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로,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3.4%)은 초과 달성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여 장애인 채용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공약내용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여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7, 9급 공개채용에서 의무고용률(3.4%) 보다 높은 비율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는 장애인 근무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직 내 장애인의 근무 여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장애인 채용을 선도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 및 포용적 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을 축소하기 위해 장애인 구분모집 합격자를 미달기관에 우선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해당 사항 없음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장애인 구분모집	매년 1월	매년 12월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전년도 12월(수요조사)	매년 12월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서비스 확대	연중	-
장애인 근무여건 실태조사 실시	22년(격년 실시)	-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1. 청년의 정책참여와 해외 네트워크 강화
2.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

3.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4. 국민의 예산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주관부처 · 부서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시민참여

공공문제

최근 몇년동안 국민참여 제도와 창구의 양적 확대에 따라 국민의 참여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 국민청원(~'20.4월말) : 82만 6,156건(일평균 837건), 동의 1억 3,635만 건
- 광화문1번가 회원 증가 : '19년 4만명 → '20.12월 26.3만명
- 열린소통포럼 : '19년 총 11회, 838명 참여 → '20년 총 13회, 2,923명 참여
- 국민포럼 정책제안 : 총 3,595건 제안 → 정책화 혁신과제 67개 선정

참여 기회가 확대된 만큼 참여결과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참여플랫폼을 연계·통합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정책참여가 축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유연한 국민참여채널 운영 등으로 국민 참여 제도의 보완 및 운영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약내용

정부는 국민의 원활한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참여플랫폼간 연계,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 기능 강화 등으로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참여창구를 광화문1번가와 연계하고, 제시된 국민 의견에 대한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화 및 피드백을 제공
- 60년만에 개정된 청원법 시행에 앞서 국민의 청원권 행사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
* 시행령 제정, 온라인시스템 구축, 관련기관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국민이 참여할만한 주요 정책을 사전에 선정하여 기관 홈페이지 및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에 게시하고 향후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참여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이 참여할만한 정책 사전알림' 제도를 활성화한다.
- 국민·전문가·공무원이 모여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참여를 확대한다.
-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에 정책을 제안하여 토론하고 일정 수준 공론화가 진행된 경우, '정부혁신 국민포럼'과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통해 제안자와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제안을 숙성하여 정책 반영을 추진하며, 이 과정을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해당 사항 없음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광화문1번가와 참여 플랫폼과의 연계	2021. 1. 1.	2021. 10. 31.
청원법 시행령 제정	2021. 1. 1.	2021. 12. 31.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2021. 1. 1.	2022. 12. 31.
청원법 개정사항 교육 및 홍보	2021. 7. 1.	2022. 12. 31.
국민참여정책 사전알림제도 운영	2021. 1. 1.	2023. 10. 31.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2021. 1. 1.	2023. 12. 31.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1. 청년의 정책참여와 해외 네트워크 강화
2.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
3.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4. 국민의 예산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4-1.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주관부처 · 부서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국민 참여

공공문제

대한민국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 과정 중 국민 참여를 통해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2018년 도입했다. 국민이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재정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예산 편성과정에 국민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연초 국민제안 공모와 선호도 투표에 국민 참여가 집중되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숙성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아울러, 특정 사회문제에만 국한해 토론이 진행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의 재정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웠다.

공약내용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국가재정법시행령 제7조2(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동시에 사업을 숙성하는 과정에서도 아래와 같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①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숙성하는 제안형 참여

온라인 제안 공모, 공모전, 찾아가는 국민제안, 정책고객간담회를 통해 국민제안을 구체적인 재정사업으로 숙성한다. 취약계층 100명을 포함한 국민 2천여 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국민제안에 대한 공감 투표, 온·오프라인 사업 숙성 토론회를 통해 사업 숙성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형 참여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방식을 개편해 공모형 토론(기재부 주관)과 부처별 토론으로 논의 주제를 확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은 온·오프라인으로 1달 내외 진행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제안형 참여방식과 토론형 참여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국민제안 공모와 선호도 투표에 집중되었던 기존 문제점을 보완해 숙성하는 기회를 확대해 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 참여 효과 또한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이 과제는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추가 논의할 수 있다.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성·지역·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하여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회계연도 예산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예산국민참여단 상시 운영을 위해 개편 일정에 따라 운영한다.	2020년 5월 2021년 8월 2022년 8월	2021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 대한 국민 제안을 분류해 각 부처에 전달하고, 각 부처는 제안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해 기재부에 결과를 제출한다.	2021년 2월 2022년 2월 2023년 2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2023년 4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을 위한 선정 이슈를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2020년 9월 2021년 9월 2022년 9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2023년 4월
이슈별 온라인 토론 결과에 대해 현장 숙성토론회를 진행한다.	2021년 12월, 2022년 3월 2022년 12월, 2023년 3월	2021년 12월, 2022년 4월 2022년 12월, 2023년 4월
국민 제안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숙성토론 및 공감투표를 진행한다.	2021년 4월 2022년 4월 2023년 4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2023년 4월
예산국민참여단이 사업을 검토한 후 선호도 투표를 실시한다.	2021년 6월 2022년 6월 2023년 6월	2021년 7월 2022년 7월 2023년 7월
기재부의 사업검토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2021년 6월 2022년 6월 2023년 6월	2021년 8월 2022년 8월 2023년 8월



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1. 청년의 정책참여와 해외 네트워크 강화
2.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와 대표성 제고
3.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4. 국민의 예산정책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4-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주관부처 · 부서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투명성 증진·부패척결) - 모든 예산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시민참여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 경로를 확대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로 제도를 활성화한다. (거버넌스 증진 위한 ICT 활용) - 온라인·모바일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거버넌스를 증진한다.

공공문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투명성·책임성 강화가 필요하고,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 환류까지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지역의 환경, 복지, 경제 문제 등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지역 현안 중심의 문제해결형 사업을 선정·추진하여 주민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

현안(공공)문제 해결형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시

안전문제 (대구시)	골목길 화재는 우리가 지켜요!	화재에 취약한 골목길 등 소방차 진입곤란 구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위생문제 (울산 울주군)	살균 소독기 설치로 위생적 환경 조성해요!	유모차, 휠체어 등 주민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의 소독기 설치
일자리문제 (강원 춘천시)	지역버스노선을 지역주민이 친절하게 안내!	어르신 및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문제 (충남 논산시)	직접 찾아가서 집을 수리해 드립니다~!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외계층 방문 집수리

공약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에서 결산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산하여 주민주도형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며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활성화, 온라인·모바일 주민참여 방법 상시화, 찾아가는 예산학교·홍보 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 및 지역별 관심도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 우수사례(우수단체) 선정하여 사례 확산에 노력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개발·운영하기 위해 지역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자치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한다. (* 계획공모, 설문조사, 공청회, 전자투표, 주민의견서 작성 등의 방식으로 진행)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등에 대한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환류 등 전 예산 과정 및 핵심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예시-예산 과정에 대한 사전설명회, 토론회 개최 및 관련자료 홈페이지·SNS 공개) 포용적 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참여를 확대한다. (예시-온라인 화상회의, 소규모 지역회의 활용)

교류 및 동료학습

정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운영의 기법 공유, 소통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추가 정보

국정과제 75-5 :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 자치단체의 핵심사업과 정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용하여 주민 중심의 예산편성과 책임성 강화한다.

※ 이 과제는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추가 논의할 수 있다.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 수립·운영	2021. 4.	2023. 8. 31.
다양한 계층의 참여 방안·사례 및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협업 등 주민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자치단체 상시 컨설팅 실시	2021. 4.	2023. 8. 31.
모든 예산과정에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 정보의 제공·공개,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협업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자치단체 운영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2021. 8.	2023. 8. 31.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분야 선정 등을 반영한 우수 자치단체 선정 계획수립 및 선정, 우수단체 인센티브 제공 및 우수사례 확산	2021. 4.	2023. 8. 31.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공시	2022. 2.	2023. 2.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주민투표, 모든 예산과정의 주민참여예산 정보 제공·공개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설계·구축 및 자치단체 보급	2021. 4.	2023. 12.



반부패

1.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발주 및 적정성 온라인 제공

2. 내부고발자 보호
3.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생활 속 불공정 개선
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
5.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

주관부처 ·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관련자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규모산정 시스템 구축 · 운영 및 공공기관 기술지원)
OGP 가치와의 관련성	(투명성 증진) 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객관적인 용량산정으로 장비 구축 관련 국가 예산의 투명성을 증진한다. - 전자정부(’02.12.) 이후 도입된 장비의 수명 도래, 코로나19(’20.2.) 이후 비대면 사회의 정보 전달 핵심 수단으로 네트워크가 중요시되고 있어 네트워크장비는 늘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 책임성)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통한 중소기업도 동등한 조건으로 공공부분의 네트워크 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한다. - ‘규모산정’ 시스템으로 산정한 용량이 조달로 투명하게 공고함에 따라 과도한 용량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며 공공부문에서 적정용량의 네트워크장비 구축사업이 발주 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문제

정부는 행정 업무를 전산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하므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매년 900억 원 규모의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이 필요 이상의 고가 장비를 구매한다는 지적(2016년)을 반영하여 네트워크장비의 규모를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술 표준과 지침(고시)을 마련(2017)하였다.

하지만, 발주 현장에서는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 지침 이해도가 낮고 장비 적정규모를 수기로 자체 산정하는데 기술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 국가 재정의 투명한 분배와 공급이 모두 중요하므로 국가·공공기관으로 물자 구매·공급하는 조달(발주) 절차 또한 국가 재정 투명성에 직결

공약 내용

온라인 기반의 ‘규모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네트워크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들이 장비 ‘규모산정’을 쉽게 산출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 보유한 네트워크에 적절한 규모의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정보화 향상 및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자 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네트워크장비의 '규모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가 해당 기관의 트래픽 현황 및 장비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의 적정용량을 자동으로 산출하여 구축사업 발주 시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네트워크장비의 '규모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환경공단 등 몇몇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시험 운영을 실시했다.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모산정' 시스템 운영과 공공기관 담당자의 기술지원 및 이용 활성화는 네트워크 장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과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교류 및 동료학습

네트워크장비 '규모산정' 시스템 개발 후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반영할 예정

※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정부부처, 공사, 공단, 공기업 등 약 150여개 기관(정보화 담당자 약 300여명)과 민간 시스템통합업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로, 매년 4회 이상 정기적 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시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 사항, 최신 기술 동향 등 공유

추가 정보

기타 정책 및 전략 관련: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구축 전략(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12.28), 네트워크 장비산업 육성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20년 개발완료된 ‘규모산정’시스템 시험운영 및 이용 촉진 - 재정정보원, 한국환경공단 사용자 시험운영	2020. 12. 31.	2021. 4. 30.
‘규모산정’시스템 후속개발 추진 - 교환장비 DB 구축 및 서비스 기능 구현	2021. 5. 1. *설계 '21.1.~4.	2021. 12. 31.
‘규모산정’시스템 기능 의견수렴 및 환류 - 사용자 요구기능 등 편의사항 점검 등	2022. 1. 1.	2022. 8. 31.
‘규모산정’시스템 후속개발 추진 - 전송장비 DB 구축 및 서비스 기능 구현	2022. 5. 1. *설계 '22.1.~4.	2022. 12. 31.
‘규모산정’시스템 홍보 및 이용기관 확대	2023. 1. 1.	지속



반부패

1.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발주 및 적정성 온라인 제공

2. 내부고발자 보호

- 3.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생활 속 불공정 개선
- 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
- 5.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

주관부처 ·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투명성 증진

공공문제

신고자 보호제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은 낮아 신고자 비밀보장, 책임감면 강화 등 신고자 보호망 확대가 필요하다.

* 공익신고 장애요인으로 응답자의 67.5%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꼽음(‘19년 부패인식도 조사, 국민 1,400명 대상)

대형 부패사건일수록 내부신고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워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이외에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약 내용

(비밀보장 강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공개 시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한다.

(책임감면 확대) 위원회의 요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행정처분을 자체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구조금 확대) 부패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민 · 형사상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까지 지원 확대한다.

- 신고자들이 신고와 관련하여 무고 · 명예훼손 ·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

(비실명 대리신고 지원) 비실명 대리신고 비용 지원을 통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한다.

⇒ (기대효과) 신고자 보호망 강화 및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도모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국정과제(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와 연관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2020.9.1.	2023.8.3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20.9.1.	2023.8.31.



반부패

1.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발주 및 적정성 온라인 제공
2. 내부고발자 보호

3.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생활 속 불공정 개선

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
5.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

주관부처 ·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시민참여, 정부책임성

공공문제

- 반부패 노력에 따라 2020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80개국 중 33위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인 지표는 향상되었다.
- 그러나 한국사회 국민들은 ‘부패’의 개념을 뇌물, 횡령 등 전통적 부패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공유하는 ‘신뢰성’(Integrity)의 가치까지 확장하여 보다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 특혜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는 등 사회적 신뢰자본의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 금수저, 부모찬스, 낙하산, 입시·채용비리 등 각종 불공정 논란
- 특히 밀레니얼·2030 등 미래세대는 기회의 불공정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강력한 공정성 제고 대책이 요구된다.

공약 내용

- **(공약)**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고 사회 신뢰자본의 형성을 가로막는 국민생활 속 불공정 요인을 발굴·개선한다.
 -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이 ‘직접’ 느끼는 불공정 요인 발굴한다.
 - 특히 교육·채용 등에 있어 청년의 진입을 가로막는 기회의 불공정을 집중 개선함으로써 공정 감수성이 높은 청년의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기대효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특혜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자본을 구축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 **(1단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 속 불공정 요인 발굴**
 -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민신문고, 지자체 개별창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데이터*를 활용, 주요 불공정 이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한다.
 - * ’20년 수집데이터 총 1,230만건
 - 민원유형·사례, 요구사항 및 시사점 등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 발굴한다.

• **(2단계) 국민 소통·참여를 통한 개선방향 마련**

-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제안과제 검토 등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 국민생각함 투표·설문·토론, 전문가 의견수렴, 온·오프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론화한다.

• **(3단계) 생활 속 불공정 개선과제 권고**

- 교육·채용·주거 등 사회·경제활동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생활밀착과제* 및 국민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주요 정책·제도의 불공정을 개선한다.

* 자격시험, 기숙사, 장학금, 임대주택 등

- 비대면 소비문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한다.

* (예) 공유·구독경제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제도의 미비 등

• **(4단계) 이행관리를 통한 법·제도의 실질적 개선으로 사회신뢰 구축**

- 실제 제도가 개선되기까지 권고 이행여부 주기적 점검(반기)·평가(매년)한다.
- *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 실제 개선여부 반영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주요 개선완료 사례를 신속하게 공개·확산하여 생활 속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가 실제 어떤 변화로 피드백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공유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과 관련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민원 빅데이터 분석(수시)	2020. 9. 1.	2023. 8. 31.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매년)	2020. 9. 1.	2023. 8. 3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수시)	2020. 9. 1.	2023. 8. 31.
생활 속 불공정과제 개선 권고(수시)	2020. 9. 1.	2023. 8. 31.
이행점검(반기)·평가(매년), 개선사례 홍보(수시)	2020. 9. 1.	2023. 8. 31.



반부패

1.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발주 및 적정성 온라인 제공
2. 내부고발자 보호
3.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생활 속 불공정 개선

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

5.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

주관부처 · 부서	국민권익위원회/민간협력담당관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투명성 증진/시민참여/정부 책임성

공공문제

한국 정부는 부패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도 측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 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부패를 상당한 부분 개선(권익위 부패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금품 · 접대 등 부패제공 경험은 2% 이하)하였다.

그 결과,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역대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국가순위도 지난 2년 동안 12단계 상승(51위→45위→39위/180국)하였으며,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공공청렴지수(IPI)’는 117개국 중에서 20위로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OECD 가입국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국민들 또한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미래에는 청렴한 문화와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국가들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민의 삶도 윤택하게 할 것이므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사회의 청렴성 향상과 사회적 신뢰 자본의 축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바,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노력과 함께 민간(시민사회단체, 기업, 일반 시민 등)부문과의 소통 ·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한다.

공약 내용

(공약) 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의 공약에 따라 반부패 · 청렴을 주제로 민관 거버넌스(중앙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17개 광역시 · 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축 완료하였고, 거버넌스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연계하여 OGP 제5차 국가실행계획에는 ①민 · 관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 ② 주요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시 · 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노력과 청렴사회협약 이행을 점검 · 평가하여 이행력을 확보, ③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확대한다.

(기대효과) 공공기관이 보다 공정 · 투명한 행정 · 경영을 실천하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시민단체, 기업, 지역주민 등)의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과 정부가 함께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 민-관 간 청렴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추진

- 중앙 및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 운영 근거를 총리 훈령에서 부패방지 권익위법으로 상향 입법
- 중앙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3단계→2단계)하여 정책 제안 · 논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책 제안의 완성도 제고
- 청렴 인식 공유 및 청렴 행정 · 경영 실천 등을 위해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앙과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간 정책 제안 결과 공유 등 교류 활성화

• 공공기관의 청렴사회협약 이행 등을 점검 · 평가하여 이행력 확보

- 공공기관의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①민간부문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활동과 ②민 · 관 협력(good governance) 활동을 평가하는 지표를 반영(9점/100점)
※ '20년 평가대상(264개 공공기관) : 주요 중앙부처(38개)와 17개 광역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공공기관(226개 :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공립대학, 공직유관단체)

• 시민사회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확산 활동 확대

- 민간단체가 자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국민권익 증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육성 · 지원 (매년 1억 5천만원 ~ 2억원, 1년 단위 선정 · 지원)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 · 청렴 소식 및 윤리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매월)하고, 윤리경영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강의를 지원(매년 20회 내외)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국정과제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과 관련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중앙)청렴사회민관협의 설치 근거 입법	2020. 9. 1.	2022. 8. 31.
(중앙)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의사결정체계 효율화 및 정책제안의 완성도 제고(전문가 참여) 등	2020. 9. 1.	2022. 8. 31.
청렴문화 확산 활동 및 청렴사회협약 이행 평가체계 마련	2020. 9. 1.	2022. 8. 31. (1년 단위 평가, 계속)
민간단체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 육성·지원	2020. 9. 1.	2022. 8. 31. (매년 계속)
민간기업 대상 윤리경영 지원(소식지, 강의)	2020. 9. 1.	2022. 8. 31. (매년 계속)



반부패

1. 공공기관 네트워크장비 발주 및 적정성 온라인 제공
2. 내부고발자 보호
3.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생활 속 불공정 개선
4.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 만들기

5.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

주관부처 · 부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관련자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 시민사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
OGP 가치와의 관련성	시민참여

공공문제

최근의 각종 사회문제는 복합적·다차원적 원인에 기인하여 정부 단독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참여는 정책과정의 정당성을 넘어, 정책 결과의 합리성·수용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관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참여 기반 조성 및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약 내용

이 공약은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민·관 협치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시민사회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의 온·오프라인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지원 등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 참여 문화 확산과,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보급을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을 도모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이 공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단체의 공익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국정과제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연중	
정부-시민사회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연중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매년 1월	매년 12월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보급	‘21.1.	‘21.12.



포용적 디지털 혁신

1. 디지털 포용 확대

2. 디지털·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3.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5. 회의 정보공개 확대

주관부처 ·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

공공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은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 능력과 활용 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교육, 디지털워크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나, 디지털 포용 없이는 수요·공급 모든 측면에서 취약계층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누구나 단순 정보 수집을 넘어 디지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활용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약 내용

①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현황)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관,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집합 정보화 교육을 추진 중이나, 교육 장소를 취약계층 시설 위주로 고정 운영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교육 대상자 수 대비 실제 교육 인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일반 국민 중에도 향후 지능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나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향후 계획) 대한민국은 우선 집 근처 생활 SOC를 활용한 전 국민 오프라인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집 근처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등 생활 SOC를 활용하여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매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고령층·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기차표 예매·모바일 금융 등 스마트폰 활용 방법, 사이버 사기 예방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본 역량 등이 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역량교육을 확대할 것이다.

둘째로, 원하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 척도를 개발하고,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다.

②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현황) 대한민국은 전국 어디서나 이용자에게 적절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등 농어촌 주민·장애인 등의 방송·통신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계층, 소득수준 등에 따른 디지털 기기 보유율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향후 계획) 첫째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도시와 농촌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확대할 것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할 예정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디지털 시대에 최소한의 디지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필요한 스마트 기기와 통신료를 지원할 것이다.

③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현황) 디지털 관련 민간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디지털 포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사업 집행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의식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의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격차는 기술이 발전하는 한 사라지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 디지털 포용 관련 중장기적 정책·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등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시민사회·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 포용 연합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 발굴, 법·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의무,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디지털 포용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취약계층에 차별과 배제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제도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을 추진하여 디지털 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심화를 예방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해당 사항 없음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SOC 교육장 등 디지털 역량 센터 연간 1,000개소 운영	2020. 8.~	계속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2021	-
공공장소 신규 와이파이 설치 (4.1만 곳)	2020	2022
농어촌 마을 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보급	2020	2022
‘디지털 포용 법률(가칭)’제정 추진	2020	2021



포용적 디지털 혁신

1. 디지털 포용 확대

2. 디지털·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3.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5. 회의 정보공개 확대

주관부처 · 부서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관련자

|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시민사회) 한국리빙랩네트워크, 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OGP 가치와의 관련성

| (투명성 증진) 지역사회 문제 발굴·재정의·해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책사업 정보 접근 보장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 지자체 공무원, 연구자 등이 상호 원활한 정보 공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집행 과정 투명성 증진

(시민참여)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약자,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 조직의 정책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방안을 다양화

-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 조직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제 해결 협력기반 마련

(과학기술·ICT 활용) 주민 생활 현장 문제 개선에 과학기술·디지털 적극 활용 지원

- 디지털·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공공문제

- 부처별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은 많으나 지역주민들이 과학기술·디지털을 활용해 주민 생활문제를 해결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사업자 위주로 추진되어 주민참여를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어 주민이 보다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지역 사회문제 해결사업이 부처별로 개별 추진되다 보니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나 개별 부처별 한계로 주민이 체감 하는 실질적인 변화 창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 (행안부) 지자체 중심의 지역 현안문제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체로 과학기술·ICT 전문가 지원이나 인프라 활용 등이 제한적이다.
 - (과기부) 국민(지역주민)의 체감도가 낮은 연구자 위주의 기술개발(R&D)로 과제 종료 후 개발된 기술을 지자체가 수용하지 않거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 예) 환경부·과기부 등 다부처 R&D사업('14~'17)으로 '녹조 제거용 응집제'를 개발(한강, 낙동강 시범 적용)했으나 지자체가 식 수 오염을 염려로 사용 거부한 사례 등
- 국민 인식조사 결과 한국의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과학기술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 한국 사회문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 (대상) 일반시민 1,000명(응답 완료), 분야별 전문가 432명 대상, '18년 3월 / 출처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 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

- 국민들은 한국의 사회문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인 반면, 해결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 국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중 : 일반시민 83%, 전문가 77%
- 과학기술의 역할이 보통이상(보통+높음) 응답 비율 : 일반시민 89%, 전문가 79%
- 일반시민의 참여 경험은 매우 낮으나, 참여의사는 매우 높다.
- * 93.7%의 일반시민들이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해본 경험은 없지만, 해결과정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67.5%)'고 답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가급적 참여하겠다(80.5%)'고 응답

공약 내용

① 디지털·과학기술 기반의 현장 문제 해결사업 추진

- 주민·지자체와 과학기술 연구자가 직접 소통하며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부처(행안부·과기부)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 행안부의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체계와 과기부의 과학기술·ICT 전문성을 연계한 새로운 부처 협업사업*을 추진한다.
- *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은 과기부가 맡고 지역 현안 발굴, 주민·지자체 소통, 기술적용 후속조치 등은 행안부가 담당 하되 모든 과정을 공동 추진한다.
- 기술자문단이나 전문가그룹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민참여 등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 * 기술자문단 구성 및 지자체별 컨설팅 실시 등
- ** 행안부-지자체/과기부-지자체 간 협력으로 주민의 부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② 지역주민의 참여방안 다양화

- (스스로해결단) 지역문제 해결사업의 주민참여 확대와 실질적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스로해결단**'을 필수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
- * 구성/역할 : 총 11~15명 내외 / 사업추진 방향 및 기술개발·적용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사업 모니터링 등의 역할 수행
- (리빙랩 도입) 과학기술 연구자와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기획부터 기술개발 및 후속 적용·확산까지 함께 소통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기획리빙랩*'을 운영한다.
- * 문제기획리빙랩(지역현안 및 문제 정의, 해결방향 설정) → 연구개발(R&D) → 기술적용·확산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① 디지털·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모델 및 성과 창출

-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지자체 공무원·연구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현장 수요 파악, 해결 사례 창출
- ※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과정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자체로 성과 확산
- 주민·지자체와 연구자가 지역 현안 및 기술개발 제안 내용 등을 상호 공유·소통*하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과학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현장 이해도 증진
- * 주민·지자체 : 여러 연구자의 기술개발 제안 내용을 직접 듣고 적합한 내용 선택 / 연구자 : 지역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직접 듣고 기술개발 내용을 보완 발전



② 지역주민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및 참여 권리 보장

- 지역사회 주민생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사업 수행시 주요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 관심자 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 지역 소멸 위기 지역 및 장애인, 노약자, 여성, 아동 등 지역사회 약자들의 삶의 질을 증대하기 위한 과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정책사업 참여 권리 보장

③ 부처 간, 부처-지자체 및 시민사회 주요 기관 간 협력기반 강화

-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적용까지 전 과정을 협력하는 체계 도출로 “R&D + 非R&D” 모델 도출 및 관련 부처/부서로 확산
- * 기술개발(R&D)과 기술적용·확산(非R&D)의 전주기 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기여
- ※ 행안부·과기부 협업사업의 성공사례 창출 후 타 부처로의 확산 추진
- 문제해결 과정에서 도출된 제품·서비스 등을 공공조달 및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해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생태계 지원

교류 및 동료학습

- 리빙랩 운영을 통한 중앙-지방-시민사회 협력 및 문제해결 성과 사례 보유국 교류 희망
- 한국의 성과 사례 창출 후 관심 회원국에 과정·성과 공유 의향 있음

추가 정보

- 2020년 정부혁신 계획 포함 과제
- 2020년 지역혁신 종합계획 중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주요 과제(행안부)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 관련 과제(과기부)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2021 과학기술 · 디지털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추진		
2021 실행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현안 수요 및 연구개발 수요 조사	2020.6.	2020.9.
2021 실행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기획(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2020.9.	2021.1.
2021 실행과제 확정 및 행안부-과기부-지자체간 업무협약	2021.4.	2021.4.
2021 실행과제 확정 후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지원	2021.4.	2022.6.
2022 과학기술 · 디지털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추진		
2022 실행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현안 수요 및 연구개발 수요 조사	2021.6.	2021.9.
2022 실행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기획(문제기획 리빙랩 운영)	2021.9.	2022.1.
2022 실행과제 확정 후 연구개발 및 현장 적용 지원	2022.2.	2023.6.
성과 공유 및 타 부처 · 지자체 확산 추진		
2021 실행과제 성과 공유	2022.11.	2022.12.
2022 실행과제 성과 공유	2023.11.	2023.12.
혁신기술 · 제품 선정 및 공공조달 연계 협약	2022.12.	2023.12.



포용적 디지털 혁신

1. 디지털 포용 확대
2. 디지털·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3.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5. 회의 정보공개 확대

주관부처 · 부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재난·안전 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민간의 생활 편의 향상,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문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국민 모두는 자신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안전 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통합 창구를 제공하여 국민이 쉽고 빠르게 안전 정보를 얻고 재난·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약 내용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현재>

정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동 정보와 관련된 통합 창구의 부재로 국민들이 일일이 개별 사이트를 방문하여 정보를 얻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향후 계획>

대한민국은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안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확대할 예정이다. 동 계획하에 행안부, 국토부, 산업부 등 11개 부처 14개 시스템을 우선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지도기반(GIS) 방식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각 부처의 데이터 보유 현황 및 공개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연계 가능성을 점검하여 점진적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대한민국은 안전정보를 통합 공개하기 위해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별도의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점차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해당 사항 없음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2.1.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신규 구축	2020	-
2.2. 시스템 연계 범위 확대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	2021	2022



포용적 디지털 혁신

1. 디지털 포용 확대
2. 디지털·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3.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5. 회의 정보공개 확대

주관부처 · 부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사회문제 해결 등에 국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공공문제

대한민국은 데이터의 가용성, 접근성 및 활용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평가하는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가 개방되는데 비해 공공데이터로부터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및 연구 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정부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위기 대응 및 극복을 위한 도구로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중요성과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다. 시민들과 개발자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코로나맵(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시각화 서비스), 마스크앱(공적 마스크 판매 제공 서비스) 등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는 위기 극복, 경제 발전,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약 내용

민간 수요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2.0」 전략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 디지털 정부, 데이터 경제의 선두에 서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2.0」은 ①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데이터 개방하고, ②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제공하며, ③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활용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①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금융정보 등 신산업 기반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현안을 반영하여 재난안전, 생활환경 분야의 데이터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회문제해결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직접 개방이 어려운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방하여 국민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데이터를 생산 및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 ①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개방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제영역별 전문가그룹 TF, 데이터 활용기업, 기술발전, 기관의 준비도, 제도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② 비정형 데이터(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는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이 곤란한 데이터는 진위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③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시민개발자와 국민 참여(클라우드소싱) 기반으로 국민과 정부가 함께 데이터를 수집 및 생성하여 개방하겠습니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해당 사항 없음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1.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이행	2020	2022
2-1. 비정형데이터 단계적 개방	2020	2022
2-2. 진위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제공	2021	2022
3. 클라우드 소싱 기반 데이터 수집, 생성 및 개방	2021	2022



포용적 디지털 혁신

1. 디지털 포용 확대
2. 디지털·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3.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데이터 개방
4.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5. 회의 정보공개 확대

주관부처 · 부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행정기록지원과
관련자	해당 사항 없음
OGP 가치와의 관련성	투명성 증진 :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철저한 기록화를 통해 책임 있고 투명한 행정 구현

공공문제

공공기관 의사결정과정의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 작성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 상*의 회의록 작성양식(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 포함)으로는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②항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②항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약 내용

이 공약은 공공기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회의록 의무생산 대상 회의에 대하여 생산·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회의록 생산관리의 토대가 되는 공공기관 회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회의 중 유형별로 회의록을 선정하고 수집하여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회의록 작성기준을 강화한다.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활용 방법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우선 회의록의 정상적 생산·관리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각급 기관 회의록 의무생산 대상 회의의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 ② 조사된 회의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유형별로 주요 회의를 선정하여 각 회의의 별 생산된 회의록을 수집하고 회의록 작성 시 필수 구성요소의 준수 여부,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충실도 등을 분석한다.
- ③ 회의록 작성사례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침의 보완 등 회의록 생산·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류 및 동료학습

해당 사항 없음

추가 정보

해당 사항 없음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회의록 의무생산 대상회의 현황조사 및 작성사례 조사·분석 (대상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2020. 9.	2020. 12.
회의록 의무생산 대상회의 현황조사 (대상 : 대학, 직접관리 공공기관, 군기관)	2021. 1.	2021. 7.
회의록 작성기준 강화(관련 지침(매뉴얼) 보완 등 검토)	2021. 8.	2021. 12.

